

시선

사설

총장 선출 방해하는 소통 부재

구성원의 염원을 담은 총장 선출이 한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달 24일 일곱 명의 총장 예비 후보자가 공개되며 막연했던 총장 선출은 조금이나마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그간 수많은 갈등과 협의를 거쳐 현재 단계에 도달한 만큼 이는 작지 않은 성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의 성과에도 달한 과정을 살펴본다면 단 한 번도 매끄러운 적이 없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칠거칠한 사포처럼 만든 것은 ‘소통의 부재’였다.

구성원의 대표자 총장을 뽑는 과정인 만큼 조직 내 합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총장 선출 관련 협의 과정은 시작부터 잡음의 연속이었다. 얽혀있는 이해관계 속 각 집단의 논리는 소통의 부재를 낳았고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졌다. 구성원 간 논의를 좁히지 못해 무의미하게 흘러보낸 시간만 해도 결코 적지 않았다. 앞서 보내버린 시간 탓에 현재 총장 선출 절차는 물리적으로 여유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소통의 부재가 매끄러운 논의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단 건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부터 소통의 부재는 끊임없이 지적됐고 앞으로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소통 부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나비효과를 줄이는 게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총장 예비 후보자 등록 단계에 이른 현재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회의 결과가 투명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긴다. 총추위 회의록은 요약문 형태로 홈페이지에 뒤늦게 업로드 되는 데 그친다. 대학주보와 불규칙한 총추위

행정지원단 이메일을 제외하면 정기적인 소통 채널조차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현 상황만 봐선 대학이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던 인상을 주긴 어려웠다.

외부 추천으로 등록된 김도연 예비 후보자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16일 성원된 제 1차 총추위 회의에서 6명의 후보자가 최종 예비 후보자로 추려졌다. 하지만 제 2차 총추위에서 한 명의 외부 후보자를 추가한 상황에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구성원은 결의문을 통해 의혹에 대한 대학 측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다. 즉각적인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총추위에서 ‘행정상의 착오’란 의견을 밝힐 뿐이었다. 이러한 답변이 구성원을 충분히 설득했음지는 의문이다.

소통의 부재는 더 큰 문제를 부를지도 모른다. 소통의 부재로 일어난 김도연 예비 후보자 등록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지금까지 어렵게 이뤄온 협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었다. 소통의 부재는 구성원의 불신을 낳고 불신은 결국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다.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총장만 뽑힌다고 그 이후 더 나은 경회를 기대할 수 없다. 이뤄낸 성과에 주목하기보다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총장 선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내일까지 고민하는 안목이 시급하다. 대학과 구성원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때 진정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사소한 잡음도 줄이려는 노력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것이다.

만평 - 총장후보 추천과정 소통 부재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2)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숙 | 편집장 이후송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재인(주) |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억당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최명길, 김상헌 되기

세시봉

김수혁 <기획팀장>



지난 9월 한겨레 발 보도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최영에 위원장이 구설에 올랐다. 기사는 최 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위 핵심 과제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조직 내부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 전반에 걸쳐 성별, 성 정체성, 종교, 인종, 장애 등의 일체의 소수자성을 이유로 한 비합리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인권위 내부의 불만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최 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미루는 이유였다. 한겨레 기사는 인권위 관계자를 인용해 최 위원장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의 공격이 우려되니 다음 총선까지는 차별금지법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은 자연스레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누군가는 최 위원장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런 의견에 큰 그림을 못 보는 도덕 결벽증의 발로라고 비아냥댔다. 하지만 지금에 와 돌이켜 보면 논란은 수면에 잔잔한 파문만을 남기고 다시 흘러가 버렸다. 서초동과 광화문에

는 촛불과 태극기와 구름 같은 인파가 모여 100만이네 200만이네 세 다툼을 벌였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비겁함을 규탄하는 분노도, 큰 그림을 보자는 신중함도 그런 위세는 갖지 못했다.

물론 우리 사회에 소수자들에 대한 증오를 부채질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세력이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그들에게 공격하기 좋은 구실이 되리라는 것은 사실이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현재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그의 선의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그는 국가기관의 수장이니 정무적 판단 또한 필요하다고 여겼으리라 본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 결정에 인권위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일, 세간에 속된 말로 ‘인권위가 대통령을 들이받았다’는 관전평이 돌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위는 원래 그런 일 하는 곳’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면 씁쓸한 맛을 지을 수가 없는 것 역시도 사실이다.

시계를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자. 10만이 넘는 청군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넘어 조선을 침공하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임금과 조정은 남한산성에 갇혀 버린다. 성 밖은 청군에, 성 안은 추위와 굶주림에 에워싸였다. 근왕병의 지원은 요원하기만 했다. 임금은 화의론의 손을 들고 최명길은 ‘조선의 왕이 청의

황제에게 신하를 자칭하며 항복한다’는 내용의 국서를 지어 올렸다. 척화론을 주장한 김상헌이 통곡하며 문서를 찢어발기자 최명길은 종잇조각을 그러모으며 “글을 찢는 자도 없어서는 안 되고 글을 주워 맞추는 자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최명길은 자신과 김상헌이 대립하지만 국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심하진 않았다.

최명길과 김상헌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은 언제나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고민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마주했던 현실과는 달리 현대 민주정치의 유쾌한 점은 어느 쪽을 고르더라도 이민족 황제의 감옥으로 끌려가거나 목이 달아날 걱정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안마다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최명길이 돼 볼 수도 있고, 김상헌이 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을 고르더라도 내 보조에 맞추지 않는다고 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옆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는 않는다면 더 좋을 것이다.

최 위원장은 그의 결정을 내렸다. 비록 영향력은 비할 바 못되지만 오늘은 내 결정을 내려보려고 한다. 나의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왕관을 쓰려는 자’에게

취재수첩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지난달 24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홈페이지에 일곱 명의 후보자가 공개됐다. 과연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총장선출제 기사를 맡아 사방을 쫓아다니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정말 새로운 총장이 뽑힐 수 있을까’하는 의심을 담고 있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총장선출제 논의는 그러한 의심을 키울 만큼 꽤나 긴 시간 동안, 썩 치열하게 이뤄져왔다. 때문에 새로운 총장도 아닌 후보, 심지어는 예비 후보가 발표된 이 순간도 몹시 기념비적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지금 펜을 들었다. 소회를 밝히기에 조금 이르다 싶은 시점이지만 ‘왕관을 쓰려는 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꼭 지금, 펜을 들었다. 총장선출제 기사를 맡게 된 이후 나의 걸음과 전황기는 언제나 총장선출제 논의가 있는 곳을 향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바로 ‘소통의 힘’이다. 뻔한 이야기를 하는가 싶을 수 있으나 그것은 분명 ‘진부한 것은 대게 진리’임을 다시 새

기는 경험이었다.

먼저 모든 갈등의 실마리가 소통에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내가 새로운 총장 선출에 가졌던 의심은 그 과정을 마무리 보았을 때 꽤나 합리적인 것이었다. 나는 회의는 물론이고 이는 의 자체가, 아니 민주적 총장 선출 기회가 엮어질 뻔 한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뾰족한 단어들로 무장한 성명서 공방전은 예사일이었고 서로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황도 심심찮았다. 그

“
당장이라도 논의자체를
어그러트릴것 같았던 갈등도
늘 그 실마리는 어렵사리
마련된 ‘소통의 자리’ 였다

러한 광경을 보고 있자면 갈등이 절대 해결될 수 없을 듯 보였고 당장이라도 논의 자체가 어그러질 것 같았다. 그러나 갈등은 늘 다소 허무할 만큼 쉽게 해소되곤 했다. 어렵사리 마련된 간담회, 회의, 면담 등 다양한 이름을 한 ‘소통의 자리’가 그 실마리였다. 올바른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다툼

연인이 으레 그러하듯 일단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면 어려운 문제도 금방 타협하는 식이었다. 어쨌든 그들은 민주적 총장 선출이라는 대의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눈빛이나 목소리,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것들의 작용이 그 사실을 일깨운 탓이었을 것이다. 딱 그렇게 소통은 늘 갈등을 싱겁게 했다.

다음은 구성원의 대표라면 마땅히, 그리고 겸허히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것이다. 취재 중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성원과 논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였다. 마감에 쫓기는 입장에서 야속하게 느껴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대표’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과 달리 대표는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아닌 보다 부지런히 들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앉아야 마땅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지배자와 대표가 구분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총장이라는 자리가 꼭 그런 자리가 아닌가. 다름 아닌 경희의 대표를 우리는 총장이라 부르니 말이다. 또 그 자리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마주하는 곳일 것이기에 전하고 싶었다. “왕관을 쓰려는 자, 응당 귀를 열리라”라고,